

美-EU 그린성장 정책 엇박자

“韓, 기업부담 줄이며 성장형 탄소중립 전환을”

무협 그린성장전략 변화 시사점

美, 화석연료 중심 반 그린 정책
EU, 규제완화로 기업경쟁력 도모
양국 자국 산업경쟁력 강화 초점
한국도 지속가능 성장전략 필요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상반된 그린성장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양쪽 모두 에너지 안보와 자국 산업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 우리도 기업 부담을 줄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4일 발표한 ‘미국, EU의 그린성장 전략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는 미국이 화석연료 중심의 반 그린 정책을 강화하는 반면, EU는 그린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규제 완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최근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하고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생산 확대를 공식화했다. 또 그린뉴딜 폐기, 배출가스 기준 완화, 전기차 의무화 폐지

등 친환경 산업에 대한 지원을 철회했다. 이는 미국이 가진 글로벌 기후리더십이 축소되더라도 자국의 에너지 안보 확보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서는 풀이했다.

트럼프 정부는 또 청정경쟁법(CCA)을 활용해 철강·시멘트·석유화학 등 고탄소 배출 수입 품목에 ‘탄소세’ 부과도 검토 중인데, 친환경 관점보다는 자국의 산업과 기업 보호를 위한 비관세 장벽 차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화석연료로 회귀한 미국과 달리 EU는 기존에 추구하던 그린딜 성장 기조는 유지하되 규제 기준을 완화해 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EU

집행위는 지난 2월 26일 발표한 옴니버스 패키지를 통해 그간 기업의 부담으로 지적되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CSDD), 지속가능성 보고(CSRD),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의 정책 적용 시기를 연기하거나 의무를 대폭 완화해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추구하겠다는 계획이다.

보고서는 미국과 EU의 그린 전략이 상반된 방향성을 보이고 있으나, 모두 에너지 안보 확보와 전략산업 성장이라는 목표를 향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이런 정책 방향성에 따라 발생할 새로운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특히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서 양 지역 모두가 주목하는 소형

모듈원자로(SMR)와 천연가스 확보 관련 LNG 운반 선박, 터미널·저장시설 등 인프라 투자 확대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제시했다.

또 미국이 화석연료로 회귀하면서 석유화학 플랜트도 사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친환경 산업인 전기차의 경우 관련 지원을 줄이고 있어 투자위축과 기술혁신 저하가 예상된다. 필수소재의 경우 친환경 규제 완화와 기업의 ESG부담이 일시적으로 경감될 수 있으나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글로벌 탄소중립 대응은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박소영 무협 수석연구원은 “각국이 앞다퉀 자국 산업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만큼 우리도 성장형 탄소중립 전략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며 “특히, 우리 기업 경쟁력이 높은 SMR, 친환경 선박 관련 기술이 국제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제 규약이나 기준 제정 회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검역본부-몽골 MULS연구원
공동예찰·조사 등
AI 국제연구 협력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국제공동연구기관인 몽골생명과학대학(MULS) 소속 연구팀을 초청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AI) 관련 국제 연구 협력체계 강화에 나섰다 24일 밝혔다. AI는 철새를 통해 우리나라에 전파되고 있고, 몽골은 우리나라로 남하하는 겨울 철새의 주요 번식지 중 하나이다.

검역본부는 겨울철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AI 바이러스 정보에 대한 사전 수집을 목적으로, 지난 2021년부터 몽골 생명과학대학과 공동 예찰 및 조사 연구를 수행해 왔다. 몽골생명과학대학 현지 연구팀은 매년 겨울 철새가 국내 도래하기 전 5월에서 10월 사이 몽골 철새 번식지에서 AI 바이러스를 예찰하고 있다.

검역본부는 해당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몽골 동남부 강가 호수에서 2024년 10월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을 정밀 검사했다. 국내 유행 중인 조류인플루엔자와 유사한 바이러스를 검출해 국내 유입원 추정에 중요한 단서를 확보하는 성과를 얻은 바 있다.

양 기관은 발표회를 통해 몽골 최신 AI 발생 정보 및 예찰 검사 현황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연구 추진 계획과 2025년 몽골 현지 야생조류 예찰 전략을 협의했다. 검역본부는 또 AI 정밀 진단 기술교육도 진행해 현지 연구팀의 진단 역량을 더욱 높였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카카오엔터, 유명 SNS 동원해 8년간 음원 ‘뒷광고’

공정위 “소비자 기만 광고행위”
시정명령·과징금 3억9000만원

국내 음원·음반 유통시장 1위 사업자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가 약 8년간 자사 음원·음반에 대한 홍보글을 일반인의 추천·소개글인 것처럼 올리는 등 이른바 ‘뒷광고’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카카오엔터가 자신이 기획·유통하는 음원·음반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

정했다고 밝혔다.

카카오엔터는 자사·타사 아티스트의 음원·음반을 음원플랫폼 등에 공급하고 있으며, 음원 유통시장 점유율이 43%(2023년 4월 기준)에 달하는 음원·음반 유통시장의 1위 사업자다.

공정위 조사 결과, 카카오엔터는 자사 유통 음원·음반의 판매·소비량 확대를 위해 유명 SNS 채널을 인수하거나 개설해 일반인의 추천글인 것처럼 자사 음원·음반 홍보글을 올렸고, 광고대행사에 바이럴 마케팅을 실시하면서도 경제적 대가제공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2016년 10월 ~ 2024년 2

월까지 아이돌연구소(페이스북), 노래는듣고다니냐(페이스북·유튜브·인스타그램·틱톡) 등 15개 채널에서 총 2353건의 게시물을 올리며 해당 채널이 카카오엔터 소유·운영 채널임을 밝히지 않아, 소비자가 상업적 광고임을 알 수 없게 했다.

카카오엔터 소속 직원이 작성한 게시물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더쿠, 뽀뿌, MLB파크 등 11개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도 37건 확인됐다.

특히, 카카오엔터가 자사 유통 음원·음반 광고에 활용해온 SMS 채널들의 팔로워 수는 총 411만명에 달하고,

온라인 커뮤니티 가입자 수도 최대 150만명에 이르러 음악 소비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카카오엔터는 이같은 행위가 부당한 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사후적으로라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내부 법률 검토를 통해 인지하고도 위반행위를 지속해왔다는 점 등에서 위법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카오엔터가 이런 사실을 은폐·누락한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온라인가입 회원권 매장만 탈퇴 가능?
코스트코코리아 전상법 위반 시정조치

공정위 경고에 시스템 전면개선

유료 회원제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는 코스트코코리아(이하 코스트코)가 온라인으로 가입 가능한 회원권을 탈퇴시엔 매장에서만 가능하도록 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4일 코스트코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경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매장 이용이 가능한 4종의 회원권 중 2종(‘이그제큐티브 비즈니스 회원권’, ‘이그제큐티브 골드스타 회원권’)에 대해 온라인 방식으로 회원가입은 가능했으나, 탈퇴는 매장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

하도록 했다.

이는 전자문서를 통해 회원 가입 등을 한 경우에는 탈퇴 등도 전자문서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 완결 서비스 제공 의무’에 위반한 행위다.

이번 조치에 따라 코스트코는 지난 1월 27일자로 해당 2종 회원권도 매장 방문 없이 전자적 방식으로 회원 탈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전면 개선했다.

코스트코 온라인몰에서 이그제큐티브 회원제에 가입한 회원은 해당 몰(마케팅페이지-나의정보-이그제큐티브 회원 탈퇴)에서 탈퇴할 수 있다. 한편, 탈퇴시 적립금은 소멸되므로 탈퇴 전 확인 및 주의가 필요하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보호무역 심화에도 外人투자 인센 확대”

안덕근, 외국인투자 전략회의
“투자 촉진정책 적극 추진 할 것”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사진)은 24일 “대내외적 정세변화에 흔들림 없이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대폭 강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외국인투자 환경개선, 전략적 아웃리치 전개 등 외국인투자 촉진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개최한 외국인투자 전략회의에서 “보호무역주의 심화, 공급망 재편 등 불확실성이 큰 대내외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이날 전략회의는 대외신인도 제고와 외국인 투자 모멘텀 유지를 위한 소통 강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주한외국상



의, 외국인투자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한 주한외국상의와외투기업 대표들은 한국 정부의 기업친화적 비즈니스 환경 조성 노력에 사의를 표하면서, 보다 자유로운 경영활동과 투자 확대를 위해 전기차·헬스케어·해상풍력 등 규제완화 및 정주여건 개선, 인센티브 확대 등을 건의했다.

한편, 이날 전략회의를 계기로 워너 에너지, 코닝 등 글로벌 기업이 해상풍력, 첨단소재 등 분야에 총 3억달러 이상의 투자 계획을 신고했다. 산업부는 이번 신고식을 포함해 신고된 투자 건이 모두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해수부
평택·당진항 일원
배후단지개발 첫 삽

해양수산부가 ‘평택·당진항 2-3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 착공식을 이달 25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개발사업은 민간자본 689억 원을 유치해 오는 2027년까지 평택·당진항 일원에 배후단지 22.9만㎡(축구장 32개 규모)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평택·당진항 신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과 연계한 업무편의 및 공공용 시설 부지 14.2만㎡ ▲복합물류기업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물류·제조시설 부지 8.7만㎡를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자인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게 된다.

특히, 해수부가 경기평택항만공사와 사업 실시협약을 맺은 이후, 지난해 해수부에서 마련한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분양방식’에 대한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취득도지의 분양가상한제, 공용·공공용지 사전 확보 등을 규정한 변경협약을 이달 10일 체결한 바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1단계 사업으로 2010년 조성한 142.1만㎡와 2-1단계 사업으로 조성 중인 113.4만㎡에 더해, 2-2단계 사업(재정사업)과 이번 2-3단계 사업이 완료될 시 평택·당진항에는 총 407.2만㎡(축구장 570개 규모)의 항만배후단지가 공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연세 기자